

내달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첫삽'

“韓 라데팡스·대중교통 허브 도약”

코엑스 사거리~삼성역 사거리 구간 21만㎡ 규모 광역복합환승센터 철로·도로, 대규모 녹지 광장 조성

서울 강남 코엑스와 삼성역 사이에 광역복합환승센터 등을 조성하는 '영동대로 지하 공간 복합 개발 사업'이 첫삽을 뜬다.

서울시는 '영동대로 지하 공간 복합 개발 2공구 건설 공사(건축·시스템)' 기술제안서 및 우선 시공분 실시설계가 적격 판정을 받고 공사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내달 중 우선 시공분인 ▲2호선 삼성역 승강장 철거 ▲광역복합환승센터 GTX-A 기능실(전기·통신기계실) 마감 ▲본선 환기구 공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2공구 건설 공사는 2021년 착공해 현재 굴착 진행 중인 토목 공사와 연계해 이뤄진다.

본 사업은 코엑스 사거리(9호선 봉은사역)~삼성역 사거리(2호선 삼성역) 약 1000m 구간 지하에 21만㎡ 규모의 광역복합환승센터와 철로·도로를



영동대로 지하 공간 복합 개발 사업 조감도. /서울시

만들고, 상부에 대규모 녹지 광장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영동대로 지하 공간 복합 개발 건설 공사는 국제 교류 복합 지구 내 대중교통 등 기반 시설과 시민 편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시행된다. 시는 철도·버스를 기반으로 하는 첨단환승시스템을 구축, 스마트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대중교통 허브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실시설계가 완료된 우선 시공분은 다음달 공사를 시작하고, 본 공사는 15개

월간 실시설계 후 설계 경제성 검토(V E) 및 실시설계 적격 심의를 거쳐 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김창환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은 "혼잡하고 노후했던 삼성역~코엑스 일대가 대규모 지하공간 통합 개발로 '한국판 라데팡스'라 불리는 생활·일자리 거점이자 첨단 대중교통 허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업 일정을 착실히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원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인천시,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 확정

'노후계획도시 정비법' 등 법률 반영

인천광역시시는 지난해 12월 31일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확정하고 이를 공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상위계획의 수립과 새로운 제도의 도입 등 변화된 정책 환경에 맞춰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담고 있다.

변경안은 상위계획인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과 최근 제정된 '노후 계획도시 정비법', '철도지하화 특별법' 등 관련 법률을 반영해 수립됐다. 특히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 제시한 비전인 '살기 좋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상생 통합의 수도권'을 수용해 인천의 미래상을 '어디서나 살기 좋은 글로벌 도시 인천'으로 설정했다.

이번 계획은 원도심과 신도시 간의 균형 발전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도시 외곽의 공유수면 매립지에는 구체적인 건축계획이 마련된 이후 용도지역을 결정하는 시차지역제(Timing Zoning)가 도입됐다.

이를 적용해 북성포구 상업용지를 보전용지로 전환해 시민들이 언제든지 찾아와 즐길 수 있는 수변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도 포함됐다. 인천의 탄소배출량 중 57.1%가 발전 부문에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2045년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영흥화력발전소 부지를 조정하고 체계적 발전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계획적인 탄소중립 목표를 조기에 실현할 방침이다.

/인천=김대의 기자 dykimi@

'TK통합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지방채 한도액 초과발행 근거 마련

대구시는 12월 31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 발의, 1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 대구광역시 직접 공영개발방식을 위한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 ▲ 민간공항 건설 위탁·대행(민·군 공항 통합건설) 및 토지 조기 보상, ▲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도시보증기금 지원 등의 근거 조항들이 담겨 있다.

이번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대구시가 직접 공영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필수적인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을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돼 정부로부터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공항 건설 설계 및 토지 보상 등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주호영 의원은 여당 원내대표 재임 시절 지역 정치



대구시청 산책청사 전경.

권의 역량을 결집하고 정부와 야당을 설득해 TK신공항특별법 제정에도 기여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발의되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의 미래 100년 변명을 위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국회 심사를 앞둔 2차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 및 관계 부처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김준한 기자 kih9@

'광역 서울사랑상품권' 750억 규모 발행

25개 자치구 어디에서나 사용 가능 1인당 월 30만원까지 살 수 있어 오는 8일 출생연도 따라 판매

서울시는 오는 8일 25개 자치구 어디에서나 사용 가능한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을 75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은 5% 할인된 가격으로 1인당 월 30만원까지 살 수

있다. 보유 한도는 100만원이며, 구매 일로부터 5년 이내 사용 가능하다. 현금(계좌이체)으로 산 경우 상품권 금액의 60% 이상 썼다면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시는 동시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출생 연도(주민등록번호 둘째 자리)에 따라 '홀수'는 오전 10시~오후 2시, '짝수'는 오후 3시~오후 7시로 나눠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게 했

다. 발행 금액은 오전·오후 각 375억원씩 총 750억원이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이번 광역 서울사랑상품권 조기 발행이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고 힘든 시기를 보내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원정 기자

서울시 불합리·불필요 규제 집중 신고제 시행

서울시는 3일부터 오는 4월 12일까지 시정 분야를 대상으로 불합리·불필요한 규제 집중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접수된 신고 중 개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례를 서울시장 주재 '규제 철폐 회의'에 상정,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없앨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소상공인의 경영 활동을 제약하거나 시민 불편을 일으키는 불합리한 규제 신고는 '규제 개혁 신문고' 누리집을 통해 하면 된다.

송광남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기업과 소상공인 활동에 장애가 되는 경제·민생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서울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우선적으로 찾겠다"며 "시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원정 기자

이주호 "올해 고교학점제·AI 교과서 도입"

(사회부총리·교육부 장관)

전국 17개 지자체서 라이즈 체계 가동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체계 가동, 고교학점제 시행,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도입 추진 등 2025학년도 교육계의 본격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2일 교육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2025학년도 고등학교에서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고,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디지털 교육 대전환으로 개인 맞춤형 교육을 실현할 예정"이라며 "또 전국 17개 지자체에서 라이즈 체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지자체와 대학이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지역의 변화도 시작된다"라고 전했다.

이어 "지역 발전의 성장동력이 될 대학이 가진 강점과 지역 시정을 누구보다 아는 지자체의 전문성이 결합된 다



양한 혁신 사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해 교육 현장을 돌이켜 보며 "2024년 역시 2023년과 마찬가지로 숨 가쁘게 달려온 것 같다"고 회고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교육개혁 과제를 3대 분야, 9대 과제로 선정해 당면 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재편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양육자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국가책임 교육·돌봄 체계를 마련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라며 "올해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변화는 우리가 나아가는데 필요한 중요한 밑거름이자 자산이니 우리나라가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라고 덧붙였다.

/이현진 기자 lhj@

경북도, 中企·소상공인에 6000억 지원

중소운전자금, 소상공인육성자금

경북도가 올해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6000억원 규모의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

2일 경북도에 따르면 특별경영자금은 도내 중소기업에는 4000억원이 중소기업운전자금으로 지원되고, 소상공인에게는 2000억원이 소상공인육성자금(경북버팀금융)으로 지원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달 열린 긴급민생안정 대책 회의에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저소득 취약계층, 청년, 관광 분야 등 5대 분야에 대한 특별 대책을 마련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올해 지원되는 중소기업운전자금은 중소기업이 협력 은행에 융자 대출을

하면, 경북도가 대출금리 일부(1년간, 2%)를 지원하는 2차보전 방식으로 운용한다.

기존 지원 방식에서 올해는 한시적으로 2%를 추가 지원해 1년간 4%의 이자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육성자금(경북버팀금융)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통한 융자지원 및 대출이자(2년간, 2%)를 지원한다.

올해는 한시적으로 대출이자 3%와 보증수수료 0.8%를 지원한다.

특별경영자금 대출한도는 매출 규모에 따라 중소기업운전자금 최대 3억원, 소상공인육성자금은 최대 3000만원이며, 도가 지정한 우대기업은 중소기업운전자금 최대 5억원, 소상공인육성자금은 최대 5000만원까지 융자 추천이 가능하다. /경북=김상복 기자 ksb8100@